

개각·외교·경제... 이슈 쌓인 청와대 “바빠야, 3월이다”

박영선·우상호·진영 등 입각 예상 하노이회담 후 ‘北美 중재자’ 자부 양극화 해법 ‘혁신적포용국가’ 도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3월은 ‘슈퍼먼스’가 예상된다. 슈퍼먼스는 매우 중요한 행사 또는 일정이 잡혀있는 달을 뜻한다. 문 대통령은 앞서 1월과 2월에는 경제 행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게 3월이 슈퍼먼스로 꼽히는 이유는 이렇다. 우선 인사다. 문 대통령이 이달 안으로 7개 안팎의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여론 안팎에서 제기됐다. 특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영선·우상호·진영 등 중진인사들이 입각할 것이라는 후문이다.

박영선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우상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진영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각각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와 함께 통일부 장관에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나아가 중진인사를 중심으로 한 개각은 험난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비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중진인사들은 이미

선거를 통해 검증은 끝난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외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두 번째 만남이 베트남 하노이(2월 27~28일)에서 ‘빈손회담’으로 끝나자 국제사회의 시선은 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북미간 중재자’

역할을 자부했기 때문이다. 핵 협상 경험 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제무대 경험이 전무한 김 위원장 사이를 오가며 양측 간극을 매워주는 역할을 문 대통령이 한다는 것이다.

그레선지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회담이 빈손으로 귀결된 날 밤 6시50분부터 25분간 문 대통령과 통화를 나눴다. 향후 북미회담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정확한 일정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뿐만 아니라 이달에는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 등이 예고됐다.

문 대통령은 1월과 2월에 이어 이달에도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 축사 때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간에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함께 잘살기 위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또 하나의 도전을 시작했다.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길은 100년 전 오늘, 우리 선조들이 꿈꾸었던 나라이기도 하다. 세계는 지금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차별과 배제, 나라 간 격차와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우리의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밝힌 혁신적 포용국가는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소득주도 성장(국민 소득 증가 정책)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가 구축된 사회를 뜻한다. 이는 ‘승자독식 경제’로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도 불린다.

/우승준 기자 dn114@metroseoul.co.kr

‘어영부영’ 국회, 민생·경제 챙길까

與野, 3월 임시국회 필요성 공감 ‘여론 비난’에 임시국회 합의 가닥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3·1절 100주년 행사 등 ‘큰 행사’가 끝나고 시선은 다시 국회를 향하고 있다. 여야 모두 3월 임시국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민생·경제 등 산재한 주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올해는 사사건건 맞서는 여야의 고집으로 국회 본회의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3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월 국회마저 열리지 않는다면 민생 현안은 또 다시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 동안 16번이나 국회 일정을 볼모로 보이콧했다. 시급한 민생과제 처리에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한국당은 역시 요구한 조건을 수용해야 국회 정상화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야당 요구로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여당은 “1월 임시국회는 원래 안 하기로 했었다”며 수용 불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1월 국회 쟁점은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당시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와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에서 1월 임시국회를 하지 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만 열자고 합의했던 것”이라며 “정치공세 소재



지난달 25일 문화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가 되지 않겠느냐”고 일축한 바 있다.

2월에 들어서는 여당이 국회 정상화를 제안했지만, 야당은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조건으로 내걸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국당 전당대회 등 행사도 2월 임시국회 개최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어영부영’하던 여야는 여론 비난을 의식한 듯 3월 임시국회 필요성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경우 정부 정책의 입법적 지원을 위한 국회 소집이 필요한 상태다. 한국당 등도 당정의 실정을 지적하고, 논란·의혹을 부각해 청문회와 국정조사 실시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한국당은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지지도를 굳히기 위해 국회에서의 입지를 다져야 하는 부담도 안는다.

다만 어떤 현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최저임금결정 구조 개편 ▲유치원 3법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등 권력기관 개혁과 민생·안전·4차산업혁명 등을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 꼽는다.

한국당의 경우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지 지원에 관한 법 개정 등 국정조사와 경제·재계 현안 등을 주요 사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여당과 제1야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내년 21대 총선을 감안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5당과 문화상 국회의장은 4일 ‘초월회’ 모임을 열고 3월 임시국회 여부를 위해 회동한다. /석대성 기자 bigstar@

‘日 위안부’ 왜곡, 구글코리아에 공식 사과 촉구

더민주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가 3일 ‘일본군 피해자 할머니 문제’와 관련해 구글코리아의 공식사과를 촉구했다. 일본군 피해자 할머니 문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왜곡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전 세계 최대 무료 동영상 공유사이트이며, 구글은 2006년 10월 유

튜브사를 인수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모니터링단 분석에 따르면 유튜브 9개 채널에서 ‘위안부(일본군 피해자 할머니)는 고액 보수를 받는 매춘부였다’는 등의 9개 영상이 생산·유통됐다. 특위가 꼬집은 9개 영상 중 6개 영상은 ▲거짓말쟁이 조선인의 망언 ‘위안부 이야기’ -실은 매춘부였다 ▲한국인의 지어낸 이야기 ‘위안부’ 실은 고급 보수를 받는 매춘부였다 등의 제목으로 일

본군 성노예 만행을 부정하고 있었다. 영상에서는 일본군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못생겨서 얼굴에 봉투를 씌워야 했을 것’이라는 등 반인륜적인 망언도 즐비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의 구글과 해외에서의 구글은 경영 행태가 완전히 다르다. 특위에 따르면 구글은 독일 유튜브채널에서 ‘나치(독일 파시즘정당) 당가’가 재생되면 곧 삭제조치된다. 그러나 구글코리아는 국내채널에서 일본군 피해자 할머니뿐 아니라 5·18민주화운동, 일본의 역사적 만행 등 허위조작정보들을 방치하고 있다. /우승준 기자

‘북한식 인권’ 표현의 자유 무력화

법으로 보는 북한

인권보호 조항 10년

언론자유지수 180위 ‘세계 최하위’

북한 헌법에 인권보호 조항이 추가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수령 중심 ‘우리식 인권’이 표현의 자유를 무력화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8조는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규정한다.

◆언론자유 180위...뉴스 말하면 ‘정치범 수용소’

대한변호사협회의 ‘2018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이 같은 인권규정은 2009년 처음 들어갔다. 또한 2016년 수정보충을 거쳐 제5장 64조~80조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20가지 권리를 보장했다. 하지만 북한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의 2018년 언론자유지수를 보면, 한국은 43위인 반면 북한은 180위로 세계 최하위다. 북한의 언론인 탄압은 2016년 5월 당 대회를 앞두고 평양 취재중이던 영국 BBC 취재진 3명을 구금했다 추방한 사례로 유명하다. 이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풍뎛고 예측할 수 없는 인물로 묘사했다는 이유였다.

집회·시위·결사 역시 조선노동당이 이끄는 경우만 허용된다. 국가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소동을 일으킬 경우, 형법 209조(집단적소동죄)에 따라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해진다.

북한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표현은 수령사상과 주체사상, 조선노동당이 인정하는 사상 뿐이다. 북한의 방송은 노동당 정책을 선전·보도하고 내각 소속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지도하에 운영된다. 방송 내용은 노동당 ‘선전선동부’와 ‘통일선전부’ 지시와 통제를 받는다.

언론이 아닌 예술 분야 역시 통제가 심하다. 지난해 변혁이 탈북자 50명을 조사한 결과 북한 내 춤이나 예술 활동이 자유롭다는 응답은 36.6%로, 2016년 조사 때인 40.2%보다 줄었다. 예술표현이나 공연 전에 사전검열을 거친다는 대답은



국경없는기자회의 ‘2018년 언론자유도’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자유도는 43위, 일본 67위, 몽골 71위, 러시아 148위, 중국 176위, 북한은 세계 최하위인 180위다. 언론자유도가 낮을수록 지도에서 주황, 빨강을 거쳐 검은색이 칠해진다. /국경없는기자회 누리집 캡처

82%였다. 검열 없이 그림을 그리거나 춤추거나 노래하는 경우 사상투쟁회에 세우거나 교화소, 단련대, 출당, 정치범수용소 처벌 또는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무시 단서도 헌법에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 역시 헌법에 나온다. 북한 헌법 6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북한이 내세우는 ‘우리식 사회주의’ 속 ‘우리식 인권’의 특징인 집단주의를 가리킨다. 연구를 맡은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우리식 인권은 ▲집단주의 ▲사회주의 ▲계급적 ‘원수’를 제재하는 차별주의(계급투쟁) ▲자유민주적 인권개념에 대한 배척(배타주의)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집단주의는 ‘국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는 81조 2항이 보장한다. 우리식 인권은 보편적 인권 기준인 ▲개인주의 ▲자유주의 ▲평등주의 ▲만민주의와 정면으로 반대된다. 특히 북한 헌법 63조가 강조한 계급적·인민적 성격은 인권의 개인적·천부적 성격과 배치된다. 이는 헌법상 주권자인 ‘계급적 인민’에 포함되지 않는 ‘반동분자’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근거가 된다. 한 탈북자는 지난해 변혁 조사에서 “당국이 시키는 모든 것이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교육받는다”고 증언했다. /이범종 기자 joker@